

프랑크푸르트 선언과 해방적 기본소득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기본소득이 낯설고 새로운 생각이 아니라 제법 오래된 역사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말 그대로 기본소득 아이디어에 ‘역사적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공적 지위를 얻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부상한 구체적 맥락을 검토하게 함으로써 이 아이디어가 진전하는 조건과 이를 가로막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프랑크푸르트 선언」은 끝머리의 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8년 5월 26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제출되고 승인받은 것이다. 이 선언은 독일기본소득네트워크 내의 워킹그룹인 “디지털 화? 기본소득!”이 작성한 것이다. 「선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기본소득 논의가 크게 퍼진 배경 가운데 하나가 디지털 화이며 그런 배경 속에서 실리콘밸리의 유명 인사 가운데 일부가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기본적인 동기는 파괴적인 기술 진전 속에서 일자리 없는 미래는 불가피하므로 고용 노동과 무관한 소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침 기본소득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조건성이기 때문에 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디지털화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물론 디지털화가 기본소득 논의에 유리한 지형을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도리어 이 지형이 “왜곡된” 기본소득의 논의와 도입을 가져 올지도 모를 일이다. 「프랑크푸르트 선언」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해방적”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디지털화에 대응하자는 일종의 출발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어 원문과 영어 번역본은 각각 <https://digibge.wordpress.com/2018/06/13/unser-positionspapier-2/>와 <https://digibge.wordpress.com/digitalisation-basic-income/>에서 볼 수 있다.

프랑크푸르트 선언

해방적 접근의 가능성

지난 2년 사이에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변화했다. 실리콘밸리의 기업가와 경영자 들은 이제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환영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정보기술 부문의 일부 사용자와 과학자 들도 이 생각을 지지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한 가지 주요한 근거는 경제의 디지털화가 확대되면서 지불노동이 없어진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디지털경제와 상관없이 기본소득을 지지한다. 생계 및 사회 참여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장은 인권이다. 이것은 사회에서 디지털경제가 발전하는 것과 무관한 일이다. 해방적인 무조건적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의 한 형태이지 유일한 선택 사항은 아니다.

급격한 디지털화는 새로운 노동관계를 창출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을 촉진하고 있다. 어떤 기술이 언제 도입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장래에는 누군가가 매일 아침 사무실이나 공장에 출근해서 전날과 같은 일을 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노동”은 점점 없어질 것 같다. 디지털화는 사람들의 삶을 더 쉽게 만들고 더 자기결정에 의거하게 만드는 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노동하는 것을 옹호하려 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지불노동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며, 기계가 가져가는 노동 하나하나의 자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 내의 디지털화는 노동을 더 압박하고 사회를 덜 안전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기본소득 논쟁과 상관없이 이런 경향에 반대한다.

글로벌 디지털자본주의가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의제로 올리면서 해방적 기본소득운동 지지자들은 여기에 답할 필요가 생겼다. 우리의 관점에 따라 해방적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소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 해방적 기본소득으로 가는 길에서 이 아이디어를 함께 실현할 수 있고 실현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동맹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적 개념에 입각한 무조건적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삶Buen Vivir을 가능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다른 변화와 함께 다수의 삶의 조건을 개선할 때에만 기본소득은 바람직하다. 사회적 발전을 평가하는 우리의 기준은 모든 인간의 좋은 삶의 증대이며, 여기에는 자유와 연대, 자기결정과 기본적인 인간적 필요의 무조건적 보장이 포함된다. 기본소득으로 가는 어떤 발걸음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거기에는 광범위한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 정치적 영향력과 방향에 종속되어 있는 기술 발전으로서의 디지털화에도 동일한 것이 적용된다. 기본소득의 글로벌 차원은 기본소득이 글로벌 프로젝트로 간주되어야 하고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1. 해방적인 무조건적 기본소득과 현존하는 노동관계

디지털화는 불안정한 형태의 자영업을 부추기고 있는데, 사례비를 받는 일이나 클릭 노동이 그 예다. 이러한 유형의 노동을 표준적인 노

동계약을 통해 공식 고용으로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종종 당사자가 이를 원하지 않기도 한다. 이 영역에서 자영업 유형의 고용을 허용하려면 이러한 일자리가 규제를 받아야 하며 사회보험을 포함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빈곤을 막는 보장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보장된 생계와 사회 참여를 제공할 수 있다. 적절한 노동 및 사업의 조건, 적절한 급여,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보험, 노동과 삶의 적절한 균형을 위한 구조 등을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경제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윤과 시장에서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디지털경제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동관계의 탈규제와 유연화를 거부하며, 마찬가지로 노동력에 대한 디지털 감시, 일의 수행과 행동에 대한 통제도 거부한다. 덧붙여 우리는 디지털화에 덜 영향을 받는 고용에서 좋은 노동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그러한 좋은 조건을 회복해야 한다. 무조건적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기본소득과 좋은 노동조건의 갈등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보편적 사회보장으로서의 기본소득은 모든 개인에게 자신의 활동에 대해 서로 다른 개인적 결정을 내릴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은 자유와 연대, 모든 인간의 자기결정과 기본적 필요의 무조건적인 보장과 같은 중요한 목표를 위해 서로 다른 유형의 노동자가 새로운 동맹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선택지를 열어 준다.

2. 해방적인 무조건적 기본소득과 사회적 인프라스트럭처

그저 현금을 이전하는 기본소득은 자본주의 시장의 파괴적인 힘을 줄이지 못할 것이다. 이 체제는 돈을 벌고 이윤을 내는 사업 모델에 기초해서 물건을 생산하고 공급한다. 이 체제는 좋은 삶을 위해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라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경제적 성장에 대한 자본주의적 집착을 거부하고 우리의 자연적인 생태 체계와 환경을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떤 인간 활동이 우리의 존재 및 모든 인간의 사회적 참여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공공 인프라스트럭처와 서비스를 통해 장려되고 보호되어야 하는가? 공공 인프라스트럭처와 서비스에 책임 있고 자율적인 시민이 되기 위한 평생교육, 문화에 대한 접근, 예방적이고 치유력이 있는 의료 서비스, 다양한 형태의 대중교통, 커뮤니케이션, 에너지와 적절한 주택의 공급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들은 공적으로 재원이 조달되고 이용 시점에서 무료여야 한다. 우리는 많은 사람의 자발성에 의지해서 공공 인프라스트럭처와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데이터 공유를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데이터 공유는 공적 공급과 서비스를 최적화하는 실천적인 형태의 연대이며, 개인 데이터를 광고, 마케팅, 궁극적으로는 이윤 최대화를 이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이루어진다.

3. 해방적인 무조건적 기본소득과 사회적 생산성

한 사회의 생산성이 모든 지불노동의 합만은 아니다. 디지털화가 성취되어 사회 내 지불노동의 양이 줄어든다 해도 이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육아와 케어 노동 전 부문은 사회에 핵심적이며, 시민의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정치적 관여도 그와 마찬가지로. 기본소득은 개인이 서로 다른 활동을 어떻

게 결합할 것인지를 더 쉽게 결정하도록 해 줄 것이며, 특히 공동체적 접근법이 장려되고 공적으로 뒷받침될 때 협동적인 해결책을 더 쉽게 찾도록 해 줄 것이다. 디지털 자본가들은 지불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그들에게 디지털화는 무엇보다 시장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노동력의 유연화를 의미한다. 여성은 여전히 육아와 케어 노동의 대부분을 제공하고 있다.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여는 자발적인 헌신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과 결합한 디지털화가 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4. 해방적인 무조건적 기본소득과 공유the Commons

디지털화로 인해 우리는 어떻게 집단적 지식 생산이 디지털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지, 대안적인 디지털 생산과 네트워킹 체제가 수립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상의 생산을 민주적으로 배열하고 생태적 요구를 고려하는 사회를 만들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적 투자가 공적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집단적이고 민주적인 생산과 짝을 이루는 것이 재화의 보편적이고 민주적인 분배다. 둘 모두에게는 개인의 필요를 고려하는 보편적 시민보험, 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무조건적 시민소득 같은 것이 필요하다. 재화의 보편적이고 민주적인 분배에는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다. 이러한 공유 재화와 사회 체제의 적절한 설계, 그리고 과도한 부의 재분배. 이는 모든 사람이 인프라스트럭처와 충분한 물질적 재화에 접근하고 민주적인 협상 과정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것

이다.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기를 원하는가?

기본소득과 디지털화는 서로를 뒷받침하는 두 개의 프로젝트다. 생산과 분배는 현실의 자본과 임금의 관계가 인간, 인간의 자유, 인간의 발전 능력에 가하는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매우 추상적이고 이론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다. 디지털 공유 재화에 기반을 두는 연대 경제, 지역의 일상생활을 조직하기 위한 플랫폼, 필수 재화의 탈집중화된 생산을 위한 3-D 프린터, 디지털 신원 확인, 기후와 환경에 해를 주는 쓸모없는 소비주의를 대신하는 협동적 만족, 지식에 대한 장벽 없는 접근, 회사의 투명성, 공적 행정과 정치. 디지털자본주의는 부를 사유화하고 인간을 배제하고 인간을 사회적 불안정에 노출하며 국경과 장벽을 세우기 때문에 실질적 자유의 가능성을 파괴하고 사회적 진보를 가로막는다. 어떻게 이런 국경과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어떤 유형의 공적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와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가 그러한 변화를 위해 요구되는가? 어떻게 디지털화가 에너지와 자원을 적게 쓰는 생산과 소비에 이용될 수 있는가? 어떻게 디지털화가 에너지와 자원을 적게 쓰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적 바람과 필요가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디지털적으로 파악되어 모든 사람이 이러한 바람과 필요를 만족시키는 데 이바지하고 더 인간적인 사회를 촉진할 수 있는가?

주

이 텍스트는 2018년 5월 26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디지털화? 기본소득!” 워크숍 기간에 약 100명의 참가자의 동의에 기초하여 승인

되었다. 이 모임과 이 문서의 목적은 사실에 기반을 둔 입장을 정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화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에 정치적으로 이바지하는 것이다. 몇 가지 중요한 문제에 아직 답하지 못했으며, 몇몇 주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그 가운데는 디지털화의 내적 관점에서 나오는 것이 있다. 어떻게 데이터 생산자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는가? 이러한 기술의 생태적 결과가 극단적 수준의 에너지 소비를 기대만큼 충분히 줄여 왔는가? 디지털화에 대한 외적 관점에서 보자면, 윤리적 가치 평가의 문제에 답하지 못했으며, 특히 알고리즘에 기반을 둔 기술이 인간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 그렇다. 시드